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52
----------	------

발의년월일 : 2021. 04. 02.

발의의원 : 이영애 의원

강민구 의원

김규학 의원

김성태 의원

김태원 의원

안경은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임태상 의원

홍인표 의원

1. 제안이유

- 1991년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 대구시 아동복지 정책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 아동친화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의 보행 편의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 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아.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22조)
- 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지킴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유무, 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아동이 학대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사회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아동의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4.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5.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사업
3.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이, 여가 등을 위한 시설
2.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시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주요 정책입안자,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동실태조사를 4년 마다 실시한다.

제13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부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청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대구광역시교육청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국장
3.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부장
4. 대구광역시 구·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담당 국장
5. 대구광역시의회 추천 대구광역시의원
6.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및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추진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추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간사)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지킴이

제22조(아동참여위원회) ① 시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제언
 2.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3.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4.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② 참여위원회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 ③ 시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여위원회의 역할을 아동·청소년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아동권리지킴이)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아동권리지킴이를 둘 수 있다.

-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제언
 2.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언
 3.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